

COMMENT

선행정학 100% 완벽적중

이번 지방7급 행정학은 2019 지방7급보다는 약간 쉬웠고 2020 국가7급과는 비슷한 수준의 출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평이한 출제도 아닌 전형적인 7급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와 신경향 문제의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으며 기본적인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 암기와 이해를 요하는 문제의 출제비율도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2020 지방7급 행정학의 출제경향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번 출제역시 최근 국가7급시험과 마찬가지로 단순 암기가 아니라 행정학 전체흐름에 대한 이해와 행정마인드가 정립되어있는 수험생이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② 난이도가 약간 있는 참신한 문제로는 문16(자치단체조합), 문19(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문20(국고보조금 사례문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고득점 여부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③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문제는 거의 없었고 새로운 문제로 느껴질만큼 기출문제가 상당부분 변형, 추가되어 출제된 문제들이 많아 정형화된 기출문제에만 치중하거나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여전히 고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④ 이번 출제는 단순암기형보다 이론을 응용하여 풀어야하는 사례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암기보다 이론의 이해와 응용능력여부를 묻는 출제를 지향하였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문2의 파생적 외부효과, 문11의 내적타당성 저해요인, 문20의 국고보조금문제 등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 ⑤ 흐름과 이해를 중시하는 선행정학 스타일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95점이상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군분투하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결과는 과정을 속이지 못합니다.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며 이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일들 해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규

기출 여부

기출문제	기출변형문제	응용	신경향문제
2문 (10%)	8문 (40%)	4문 (20%)	6문 (30%)

난이도

상	중	하
5문 (25%)	13문 (65%)	2문 (10%)

중요도

A급	B급	CD급
13문 (65%)	6문 (30%)	1문

분야별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예산	환류	자치
4문	4문	2문	5문	2문	1문	2문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2021 7급 선행정학 p.184

정답 및 해설

답 ②

탈관료제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은 탈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운동(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탈관료제화보다는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를, 경쟁과 분권보다는 공공책임성과 재집권화를 추구한다.

- ☑ ① [○] 탈신공공관리는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한다.
- ③ [○] 탈신공공관리는 구조적 통합을 통해 분절화를 축소하여 **총체적·합체적 정부**로 조직을 개편한다.
- ④ [○]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란 분절적 정부에 대조되는 총체적 정부를 말한다.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비교구면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정부 가능	정부 - 시장관계의 기본철학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정부규모와 기능	정부규모와 기능 감축 - 민간화 · 민영화 ·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조직 구조	기본모형	탈관료제 모형
	조직구조의 특징	비계층적 · 유기적 구조, 분권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행정의 분절화(예 : 책임운영기관)
	조직관리의 기본철학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관리기법 도입
관리 기법	통제 메커니즘	결과 · 산출 중심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리, 개방형 인사제도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 ① X-비효율성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③ 비경합성 ④ 파생적 외부효과

2021 7급 선행정학 p.64

정답 및 해설

답 ④

제시문은 정부실패요인 중의 하나인 **파생적 외부효과**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파생적 외부효과란 정부의 개입(유인이나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역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주로 민간 반응 예측 곤란과 정치적 개입에 의한 지속행정이 주원인이 된다. 위 사례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토지거래를 규제하려는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한 현상이다.

- ☑ ① [X] 행정조직도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상회하여도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할 때까지 서비스의 생산이 계속되어 최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적 목표의 설정 현상이다.
- ② [X] 사회적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목표의 괴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 ③ [X]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원인과 개념		대응방안	민영화	보조 삭감	규제 완 화
사적 목표	내부성(공적목표와 사적목표의 괴리)		○		
X-비효율	경쟁체제가 아님으로 인한 비효율		○	○	○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개입이 초래한 비의도적 부작용			○	○
권력의 편재	권력과 특혜에 의한 분배의 왜곡		○		○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 ④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2021 7급 선행정학 p.583, 586

정답 및 해설

답 ①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 맞지만, 공무원 봉급표는 하나의 봉급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군인, 경찰직, 헌법연구관 등 **총 11개 봉급표가 다양하게 적용된다.**

- ☑ ②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된다.
- ③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4종류가 있다.
- ④ [○] 군인, 선거직, 정규임용 전 견습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견습직원은 정규공무원이 아니므로 아예 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군인과 선거직 등은 별도의 법률(군인연금법 등)이 적용된다.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적용대상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공무원 (장·차관,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도 포함)
비적용대상	① 군인 (군인연금법 적용) ② 선거직 (대통령 ¹⁾ , 국회의원 ²⁾ , 지방의원 등 선거직은 상시근무자가 아니므로 제외)

- 1)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2) 국회의원은 헌정회복성법에 의거하여 연로회원 지원금 명목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② 세출예산 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 7급 선행정학 p.654

정답 및 해설

답 ④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는 회계이다. ④의 경우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는 달리 예산한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용과 전용은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정성(질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회계는 한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회계는 한정성이 아니라 단일성이나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 ☑ ① [○]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② [○] 세출·세입예산 모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은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 대한 재정활동의 공개(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
명료성의 원칙	국민·국회의 이해 용이(예외: 총괄예산)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등)
단일성의 원칙	단수예산(예외: 특별회계, 추경예산, 기금)
한정성의 원칙	① 질적: 목적 외 사용금지(예외: 이용, 전용) ② 양적: 금액초과 사용금지(예외: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③ 시간적: 회계연도독립(예외: 이월, 계속비)
통일성의 원칙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수입직접사용금지 원칙(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기금)
사전승인 원칙 (절차성의 원칙)	국회의 사전승인(예외: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예비비)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의 일치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 ②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④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2021 7급 선행정학 p.318

정답 및 해설

답 ②

진실험설계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방식이다. 이는 사전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무작위배정에 의하여 동질적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간 사전측정값과 사후측정값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회실험방식이다.

- ☑ ① [×] 단절적 시계열설계는 준실험의 설계방법이다. 통제집단을 설계하기 힘들 경우 실험집단에 대한 정책 실시 전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단절의 크기로 정책효과를 측정한다.
- ③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준실험의 설계방법이다. 무작위배정에 의한 동질화를 피할 수 없을 때 사전측정 후 비슷한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작을 지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한 후 실험집단에만 정책을 처리하여 두 집단간 변화상태를 비교한다.
- ④ [×] 단일집단에 대해 실험에 대한 처리가 있기 전과 있는 후를 각각 측정 비교하는 것으로 대표적 비실험설계방식이다.

실험유형별 설계방법

진실험단계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적 통제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
준실험설계	축조된 통제 (짝짓기)	①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사전테스트 비교집단 설계) ② 사후테스트 비교집단 설계 ③ 회귀불연속 설계(자극 기준에 의한 설계)
	재귀적 통제	①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②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에 의한 평가
비실험설계		① 통계적 통제 : 통계적 방법으로 외생변수(허위·혼란변수)추정·제거 ② 포괄적 통제 : 사회적 표준과 비교 ③ 잠재적 통제 : 전문가의 판단과 비교 ④ 대표적 비실험 : 전후비교, 사후선정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2021 7급 선행정학 p.213

정답 및 해설

답 ②

다원주의가 아니라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원주의는 개발도상국보다는 다원화된 선진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된다.

- ☑ ① [○] 국가조합주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조합주의로서 제3세계 및 후진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위로부터) 주도하는 이익대표체제를 말한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조합주의가 대표적이다.
- ③ [○]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발적(아래로부터) 시도에 의한 것으로 서구 선진자본주의의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났다.
- ④ [○]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정치체제에 대한 접근기회가 동등하고 연대와 타협, 협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권력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 국가론의 유형 - 의제 설정은 누가 주도하는가?

다원주의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
선량주의	엘리트(자배계층)들이 일반대중 지배
마르크스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도구(K.Marx)
국가주의(베버주의)	국가 · 정부(관료)의 절대적 자율성(M.Weber)
조합주의	국가 · 정부(관료)가 이익집단 지배 · 억압

신다원론	국가가 능동적 개입, 이익집단의 특권적 지위 인정
신엘리트주의	무의사결정론(엘리트에 의한 의도적 무결정, 기각 · 방치)
신마르크스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신베버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Krasner)
신조합주의	중요 산업조직(대국적 기업 등)의 영향력 강조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합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2021 7급 선행정학 p.220

정답 및 해설

답 ②

하위정부모형은 철의삼각모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철의 삼각모형**과 동일한 개념이다.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이란 관료,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정책영역별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1960년대에 논의된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 핵심모형이다. 철의삼각모형의 경합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모형은 하위정부모형이 아니라 Hedo에 의하여 제기된 **이슈공동체**(issue community)에 해당한다.

- ☑ ① [○] 철의 삼각에 대한 옳은 지문이다.
- ③ [○] 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 학자들의 상호접촉과 의견교환에 의해 전문지식이 획득된다.
- ④ [○] 이슈네트워크는 개방된 네트워크로 정책공동체에 비해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정책네트워크의 종류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회 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지속적)
행위자간 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연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 ①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 ②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 ③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 ④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2021 7급 선행정학 p.605

정답 및 해설

답 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②③④ [○]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직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옳은 지문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는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 ④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2021 7급 선행정학 p.665

정답 및 해설

답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다.

- ☑ ① [×]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② [×]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경기침체 ·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ㄱ	ㄴ	ㄷ
① 강제배분법	산출기록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② 강제선택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③ 강제선택법	산출기록법	행태관찰척도법	
④ 강제배분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관찰척도법	

2021 7급 선행정학 p.558

정답 및 해설

답 ①

제시문 중 ㄱ은 강제배분법, ㄴ은 산출기록법, ㄷ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에 각각 해당한다.

- ☑ ㄱ **강제배분법** : 집단적 서열법으로 피평정자들을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몇 개의 집단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하는 방법. 집중화 ·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ㄴ **산출기록법** : 생산고(작업량)로 나타나는 근무실적(사실)을 수량적 · 객관적으로 평가 · 기록하는 방법으로 일상적 · 반복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 ㄷ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으로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근무성적평정 방법의 유형

	평정방법	개념	단점
평정 기 법 별	산출기록법	일정기간 생산고(근무실적)를 수량적으로 평가	
	주기검사법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의 생산 기록 측정	
	도표식평정척도법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편에는 실적 · 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	등급 간에 기준 모호, 연쇄효과
	강제선택법 (체크리스트법)	4~5개의 체크리스트 단문 중 강제 선택 ⇒ 연쇄효과 방지	평정항목 작성 곤란 및 항목이 많을 경우 혼란
	강제배분법	집단적 서열법(상대평가)으로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 ⇒ 집중화 · 관대화 방지	역산식 평정 가능성
	중요사건기록법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평정	이례적 행동 강조 위험
평정 주 체 별	행태기준척도법	평정의 임의성 ·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도표식 척도법의 한계
	목표관리법	기근무과정이나 태도보다는 결과중심의 평정	
	감독자 평정	상급자가 평정하는 전통적 방법. 수직적 계층구조가 강한 기계적 구조에 적합	
	다면(집단)평정	감독자 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 (진방위평정)	
	자기평정법	피평정자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성과를 평가 · 보고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정부는 OO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OO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OO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OO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 ① 역사요인 ② 검사요인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2021 7급 선행정학 p.314

정답 및 해설

답 ①

제시문의 사례는 정책평가의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적 요인(사건효과)**에 해당한다. 역사적 요인(history)이란 정책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외부에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전 또는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미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책 시행기간 중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것,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비가 많이 온 것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역사적 요소이다.

- ☑ ② [×] 유사검사를 반복할 경우 실험 전에 사전측정한 사실 자체가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③ [×] 통제집단이 아닌 실험집단에 선정되게 만든 요인 또는 두 집단간 **선발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회귀에 의한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경우에 발생한다.
④ [×] 연구기간 중 집단으로부터 구성원의 이탈 등 두 집단간 **구성상 변화**로 인하여 사후측정값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내적타당도 위협요인과 통제방안

요인	개념	통제방안
성숙요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집단의 특성 변화	· 통제집단 구성 · 실험기간의 제한 등
역사요인	실험기간 중 일어난 사건에 의한 대상집단의 특성 변화	· 통제집단 구성 · 실험기간의 제한
선발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	· 무작위배정 · 사전측정
상실요인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중도포기, 탈락으로 인한 차이	· 무작위배정 · 사전측정
회귀요인	극단치를 보인 실험대상이 재측정시 평균으로 회귀	· 극단성향의 집단 회피 · 신뢰성있는 측정도구 사용
검사요인	사전검사에 대한 친숙도가 사후측정에 미치는 영향	·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실험(솔로몬식 설계), 위장검사
측정수단 요인	측정기준과 측정수단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	· 표준화된 측정도구 사용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2021 7급 선행정학 p.613

정답 및 해설

답 ①

관료 개인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 자질 부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 ☒ ② [×] **체제론적 접근법**이다.
- ③ [×] **제도적 분석방법**이다.
- ④ [×]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방법**이다.

부패의 원인 접근법

기능주의적 분석	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임. 맥락적 분석.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 또는 부산물,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Nye). 과정보다 결과 중시. 어느 정도는 순기능적이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 제고에 기여
후기기능주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부패란 자기영속적인 것
구조적 분석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부패의 원인
제도적·거시적 분석	법과 행정구조·제도의 결함과 미비가 원인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
정치경제학적 분석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도덕적 접근법	부패는 개인의 윤리의식, 자질, 도덕심의 부족 탓
체제론적 접근법	부패는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관료의 도덕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란 정부주도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방적 외부 통제로는 척결이 힘들.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 가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52

정답 및 해설

답 ③

행정통제는 통제주체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방식에 해당한다. 내부통제란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나 방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행정윤리의 확립 등을 통해 실현된다.

- ☒ ①② [×] 파이너(Finer)는 외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국민정서 등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려는 책임 또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내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④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에 속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¹⁾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언론

- 1) 교차기능조직(횡적지원조직, 정부막료부처)에 의한 통제
- ① 인사: 인사혁신처
 - ② 조직·정원: 행정안전부
 - ③ 예산: 기획재정부
 - ④ 법제: 법제처
 - ⑤ 물자: 조달청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 ②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 ③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 ④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2021 7급 선행정학 p.449

정답 및 해설

답 ④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란 주인으로 하여금 대리인을 통제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 즉, 주인과 대리인 간의 대리손실(agency loss)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④의 경우 대리인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유능하고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오히려 대리손실을 줄이는 방안(대리인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이 된다. 대리손실은 자산의 특성성, 대리인의 소수성 등 대리인에 대한 선택지가 좁을 경우에 커지게 된다.

- ☑ ① [○] 합리성의 제약(인지능력의 한계)과 정보 부족은 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한계이다.
- ② [○]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은 대리인통제의 효율성을 제약한다.
- ③ [○] 대리인의 이기주의적 행동은 대리인 통제의 효율성을 제약한다.

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한계

- ① 합리성의 제약 : 인지능력의 한계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정보 불균형)
- ③ 기회주의적 행동 : 대리인의 이기주의적 행동
- ④ 자산의 특성성 : 자산의 고정성 및 이전불가능성
- ⑤ 소수 독점 : 잠재적 당사자(대리인)의 수가 적어 주인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 ②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③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된 조직이다.
- ④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412

정답 및 해설

답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수평구조의 결합이 아니라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이다. 매트릭스조직이란 기능구조를 통해서는 수직적인 통제로 전문성을 살리고 사업구조를 통해서는 수평적 조정으로 대응성을 살리려는 입체적 조직이다.

- ☑ ② [○] 태스크포스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③ [○] 프로젝트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④ [○]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매트릭스 조직

기능구조+사업부제	
장점	단점
① 기술적 전문성과 제품 라인의 혁신(대응성) 동시 충족	① 명령이원화 ⇨ 갈등
② 능력발전 · 자아실현	② 권한 불균형시 제품 조직 or 기능구조로 전락
③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③ 부하의 불완전한 장악
④ 불확실한 환경에의 대응	④ 역할갈등
	⑤ 신속한 결정 곤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 ② 설립 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021 7급 선행정학 p.844

정답 및 해설

답 ③

자치단체 조합이 해산할 경우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구성원인 관계 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 ☑ ① [○]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 ②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 동일 시·도내의 기초자치단체간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가능하지만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간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他者)로 인정한다.
-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 ③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021 7급 선행정학 p.45

정답 및 해설

답 ②

반대이다. 포스트모더니티(post modernity)의 행정이론은 산업사회의 이성(reason)이나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보다는 상상, 해체, 영역해체, 타자성(도덕적 타자) 등을 중시한다. 상상이란 소극적으로는 과거의 관행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적극적으로는 문제(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 ① [○] ‘타자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 ③ [○] 탈영역화란 포스트모더니티에 있어서의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 해체된다. 즉 지식의 경계가 사라진다.
- ④ [○]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말하는 해체라는 것은 외면적인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이론의 특징

- ① 상상(imagination) :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 ② 해체(deconstruction, 탈구성) :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 해부
- ③ 영역해체(deterritorialization, 탈영역화, 학문영역 간의 경계파괴) : 지식의 고유영역과 경계 타파
- ④ 타자성(alterity) : ‘죽자성’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적 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타인을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와는 생각이 다른 도덕적 타인(주체)으로 인정하는 상호 개방적인 인간관(시민참여의 근거)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21 7급 선행정학 p.714

정답 및 해설

답 ④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②③ [○] 「국회법」상 모두 옳은 지문이다.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을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②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③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 ④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2021 7급 선행정학 p.158

정답 및 해설

답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동형화의 과정을 통하여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된다고 설명하는데 동형화의 유형에는 규범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가 있다. ②의 경우 규범적 동형화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규범적 동형화란 전문가직업사회에서 전문가집단의 직업적 자율성을 얻기 위한 전문화 과정을 통한 동형화를 말한다.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의 예이다.

- ☑ ① [○]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의 배태성이란 동형화와 속성이 같은 개념으로 개인의 행위나 제도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맥락 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③ [○] 억압적(coercive) 동형화는 초점조직이 자신의 자원을 통제하는 다른 조직들 또는 자신의 조직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공식·비공식 압력에 순응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④ [○] 모방적(mimetic) 동형화는 초점조직이 자발적으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방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표가 불분명하고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 단순히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지방비 70%)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 ①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 ②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 ③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 ④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책보조금에 해당한다.

2021 7급 선행정학 p.885

동형화이론(DiMaggio & Powell)

(1) 의의 : 조직의 구조와 형태가 수렴되고 같아지는 현상

(2) 동형화의 유형

규범적 동형화	전문가직업사회에서 전문가집단의 직업적 자율성을 얻기 위한 전문화과정을 통한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다른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공식·비공식 압력과 통제에 순응하는 과정에 의한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선진국이나 타 조직의 성공사례를 자발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모방하는 과정에 의한 동형화

정답 및 해설

답 ③

③ 제시문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특성과 효과를 설명한 사례로 국고보조금은 지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이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지만 보조금의 특성과 본질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① [×] 국고보조금은 일정비율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률보조금 이므로 국고보조금이 30%(56억) 배정되었다면 A시가 이에 대응하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70%로써 56억원이 아니라 약 130여 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 ② [X]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유발시킨다. 소득효과란 가격변화(하락)로 인한 실질소득의 변화(증가)로 수요가 변동(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체효과란 한 상품의 가격의 하락으로 상대가격이 변하여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상수관망 구축사업으로 수도물의 질이 좋아지고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순수하게 수도물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효과이고, 상대적으로 생수보다 수도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대체효과이다. ②의 경우 수도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말과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는 표현은 틀리다. 생수공급량은 줄고 수도물의 공급수준만 늘어나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를 유발시킨다.
- ④ [X] 국고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이 아니라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보조금 방식을 사용한다.

국고보조금의 장단점

(1) 개념과 특징

국가정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정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자금

- ① 특정재원 : 용도가 정해짐
- ② 정률보조 : 사업비의 일정비율(20~100%) 지급
- ③ 경상재원 : 매년 거의 일정한 금액 교부

(2) 효용과 폐단

장점	단점
① 통일적 행정수준의 확보 ② 사회자본 등의 계획적 정비 ③ 특수재정수요에의 대응 ④ 행정서비스의 구역외 확산(외부효과)에의 대처 ⑤ 재원배분의 효율화	① 통제 수반으로 지방 행·재정의 자주성 저해 ② 보조금의 영세화 ③ 교부절차의 번잡성 ④ 지방비 부담의 과중 ⑤ 지역간 재정 불균형 및 재정격차 심화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편중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① 소득효과(income effect)란 (열등재가 아닌 정상재의 경우) 실질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하고
- ② 대체효과(substitution)란 상대가격의 변화(하락)에 의한 소비증가현상을 말한다.
- ③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비량 변화는 실질소득의 변화에 의한 소득효과와 상대가격의 변화에 의한 대체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